

법 따로 현실 따로...주민번호 수집 금지 혼선

지난 7일 본격 시행 불구
정부 사전 홍보·준비 부족
공공기관 조차 우왕좌왕
기업도 정확한 대상 몰라
곳곳 시민 불편 잇따라



주민번호 수집 금지 혼선 사례 보니

- 공공기관 개정안 홈페이지 공지 불구 입사지원서엔 버젓이
- 지역 중기들 채용 사이트 입사지원서 주민번호 요구
- 지역대학 각종 증명서 무인발급기 시스템 개선 안돼
- 병원 인터넷 진료 예약하려면 주민번호 쓰고 회원가입해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활용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 1년 만인 지난 7일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정부의 사전 홍보 부족과 업무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들의 준비 부족으로 곳곳에서 혼선과 시민 불편이 야기되는 등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공기관조차 개정된 법안 내용을 알리면서도 다른 한 쪽으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등 '엇박자'를 내는가 하면, 아예 시행 대상시설인조차 모르는 민간 업체들도 적지 않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김치연구소의 경우 10일 '주민번호

수집금지'를 알리는 내용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띄워 공지하면서도 연구원 채용 공고와 함께 올린 입사지원서에 지원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들은 채용이 확정되기 전 지원자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민간 기업 채용 사이트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인터넷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상당수는 주민번호를 요구한 입사 지원서를 버젓이 올려 놓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번호 수집이 원

천적으로 금지되며 떠들석하게 예고했던 정부 공인이 무색한 형편이다.

조선대 등 지역 대학들도 관련법에 따라 미흡한 시스템을 정비하느라 분주하다. 개정법률에 따른 학적기록·입학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성적·졸업·재학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조선대는 이에 따라 무인발급기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지만 변경 업무를 맡을 회사가 많지 않아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도 불구, 주민번호 요구 금지 대상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민간업체들이 적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확대, 해석하는 곳도 있어 정부의 홍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바뀐 법에 따라 병원 진료 과정이 아닌 단순 예약 때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할 수 없지만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을 해야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도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나아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내년 초까지 병원들의 현행 예약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내년 2월6일까지 국민 불편과 혼선을 우려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법 위반시 1차는 개선권고, 2차는 시정조치, 3차는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박기용·백희준 수습기자 pboxer@

부대원 혼재 중 “너희 대신 토끼에게 별주겠다” 키우던 토끼 죽인 ‘황당한 중령’

동물사랑실천협회 고발

사방을 혼재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때려 죽인 혐의로 군 자체 징계를 통해 보직 해임된 육군 제31보병사단 부대장이 이번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지난해 31사단에서 2명의 사방이 자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군부대 측은 가혹행위 근절 대책 등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또다시 간부의 가혹행위가 드러나 ‘헛구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사방에게 혼재하는 대신, 키우던 동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전 육군 제31보병사단 소속 윤모(42) 중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중령은 지난 6월 말 출·퇴근하는 소속 부대원들의 자카·휴대전화 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혼재하다 “(너희들) 대신 토끼에게 별을 주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토끼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로 군 검찰에 적발됐었다.

그는 지난해 말 31사단으로 전입을 뒤 부대 내 동물 사육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힐링캠프’라는 동물 우리들을 만들어 토끼·개·잉고·오리·거북이·햄스터 등을 자비로 들여와 키우던 중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군 부대는 설명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아울러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등을 통해 ‘육군 대대장 처벌 청원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협회측은 “군은 윤 중령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1만명 서명을 모아 추가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중령은 해당 행위와 관련, “동물에게 대신 별을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방들의 진정 순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물 우리를 만들었다”고 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욱기자 dok2000@
백희준 수습기자 bhj@



송원고 학부모들 광주교육청 앞 시위
지정 받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자사고 폐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인 송원고등학교의 학부모 100여명이 지난 8일 광주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조건부 승인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송원고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성적 제한 폐지’ 등을 조건으로 자사고 재

지정 받았지만, 학교 측은 사실상 자사고 폐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인권위도 필요성 인정...내년 개실 ‘군인 상담전화’ 군 당국 “이용 장벽 징계” 조직적 방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런 피해자를 돕고자 개설되는 민간 상담전화에 병사들이 쓰지 못하게 군 당국이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군에서 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당한 병사를 상담하는 전화인 ‘아미콜’(ArmyCall)을 내년 초 개설할 예정인 가운데, 군이 이를 이용하는 장벽을 징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아미콜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는 것이다.

10일 육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 본부는 지난 6월 내무 부대에 소속 장병을 교육하러며 지침을 전달했다.

육본은 “장병이 아미콜을 군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며 “군인권센터나 아미콜은 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교육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육본은 아미콜을 이용하면 군인복무규율 제25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장병에게 상기시킬 것을 명령했다.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는 군인은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의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근신, 영장 등 징계를 받는다. /연합뉴스

“커피는 처녀가 타줘야 맛있다” “밤에 술자리 따라오면 승진 해결된다” 여교사에 성적 수치심 준 고교 교장 ‘물의’

순천서...부적절한 발언 조사
여교사 20여명 진정서 제출

A교장은 1년6개월 전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 여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폭언을 되풀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교사들은 진정서에서 해당 교장이 여교사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커피는 처녀가 타줘야 맛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60대 나이 든 교사들이 모인 술자리에 미혼 여교사들만 골라 참석시키고, 회식 후에 동료 교사들에게 “한 건 갔다”고 자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승진을 앞둔 여교사에게 ‘밤에 내가 술자리 할 때 따라오면 승진을 해결된다’며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고, 교사들의 친목회비를 전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

졌다.

이 같은 사실은 참다못한 이 학교 여교사 20여 명이 수십 건의 교권침해 사례들을 모아 전남도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처럼 교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잇따르면서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의 의식 전환과 성교육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일부 교장은 아직도 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젖어 있다”며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직무교육과 성교육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도 8·15 특사 없을 듯

올해도 8·15 특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복절 특사는 없을 것 같다”며 “특사를 하려면 벌써 절차가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는 것은 2012년 대선 당시 특별사면권의 엄격한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광복절에도 특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서민 생계형 행사비·불우수령자 5925명을 특별사면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290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단행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택시·버스기사 차내 흡연 금지...위반 땀 10만원 과태료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차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됐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객차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날 29일부터 시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차내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은 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여자 목욕탕 침입 흡쳐 본 죄 가볍지 않다” 법원 50대 항소 기각

○...여자 목욕탕을 5분간 흡쳐 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

○...친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판결문에서 “강모(50)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병행이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 등을 고려하면 원심 결과가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

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

○...김씨는 지난해 10월 김해시내 한 사우나에서 지하계단으로 여자 목욕탕 비상출입문을 열고 침입, 목욕탕에 여성들의 신체를 5분간 흡쳐 본 혐의(성적 목적 공공자소침입죄 적용)로 기소, 1심에서 징역 4월과 40시간의 성폭력범죄자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받자 항소.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21466	3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2동 11층 1104호 49.97㎡	아파트	74,000,000	
2014타경 6334	1	남구 군북로148번길 3, 3층 318호 65.34㎡	아파트	53,000,000	관리비미납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3타경 21466	2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319, 416㎡	대	72,493,990	일괄매각, 체외외 건물및태양광설비 포함
2014타경 4420	1	화순군 동면 대토리 649 120.77㎡ 부속건물 6.6㎡ [현황: 청고]	단독주택	83,040,310	현황:아스팔트층
2014타경 7177	1	동구 광양로345번길 9 38.67㎡ 체외외 건물 25.7㎡	대	25,013,100	일괄매각, 체외외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2240	1	북구 매곡동 산41-4 5792㎡	임야	104,256,000	
2014타경 5102	1	남구 구소동 542-2 1144㎡ [분묘대묘분묘지 지권성립여지있음, 매각체외비할부수준채	전	45,7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소재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4타경 5102	2	동소 703-8 2536㎡ [매각체외비할부수준채]	답	93,83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동소 705-8 727㎡	답	22,53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5522	1	북구 하서동 376 1층 167.59㎡옥상정 146.69㎡	임야	146,890,000	일부도시계획시설
2014타경 5683	2	화순군 능주면 백막리 226 1580㎡ [분묘대묘분묘지 지권성립여지있음]	전	146,890,000	도시지역
				26,86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분묘소재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4타경 3069	1	북구 양산동 268 213㎡	대	1,612,900,800	일괄매각, 체외외 건물포함
2014타경 5683	1	서구 문문2로 54, 6층 72호 [화정동, 금호]	근린시설	150,000,000	임차인있음, 관리월도 32,199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측과 다소간의 차이를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반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청인이 매각절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4. 8. 26. [화] 10:00

3. 매각절기일 : 2014. 9. 2.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방

5. 매각방법

① 입찰방법은 법원의 기입용량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보증금을 함께 입찰방에 넣어 입찰하여 투찰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발행한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 또는 은행이나 지급보증기관을 제공한 문서[발행 보증서를 준비해야 함]이다.

②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제에 따라 입찰을 신청하여 접수하여야 함이다.

③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이다.

④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이다.

2014. 8. 1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